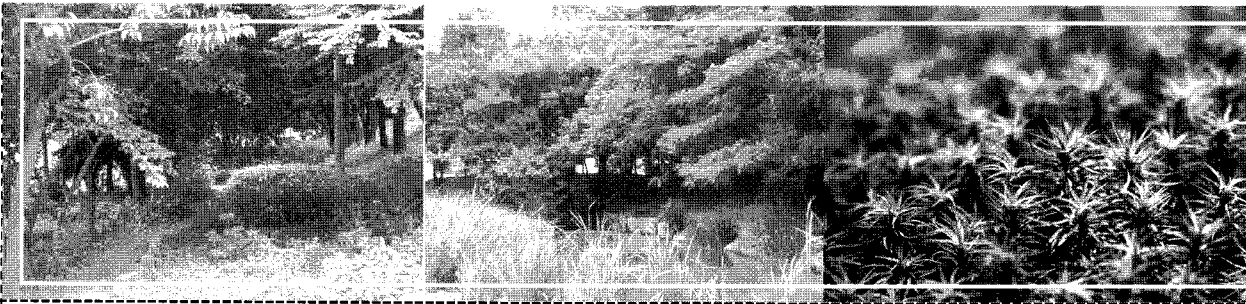


● ● ● 종 · 자 · 전 · 쟁

로열티 年 1000억원 시대로



“장미1그루 2500원중 로열티가 1450”

딸기 양란(洋蘭) 등 31개 작물이 내년에 품종 보호 대상 작물로 편입됨에 따라 국내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농가들이 외국산 작물 재배로 이익을 내기 어렵다며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는가 하면 종묘 업체들은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종자특허권을 잇달아 주장해 ‘종자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농림부와 국립종자관리소에 따르면 품종 보호 대상인 외국산 작물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은 2000년 30억 원에서 내년에는 700억~1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품종 보호

대상 작물로 186개로 2000년(57건)의 3.3배로 늘어난다.

로열티 추산 금액은 외국산 특허작물로 연간 총생산원가 추정금액에 로열티 비율(10%)을 곱한 것. 그러나 장미 국화 등 일부 작물의 로열티는 생산원가의 100~120% 수준이어서 실제 로열티 지급액은 더 많을 수 있다.

외국산 작물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이 급증하는 것은 농림부가 종자산업업을 근거로 1998년 이후 품종 보호 대상 작물을 매년 늘리면서 외국 종묘회사가 특허권을 적극 행사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내년에 31개 작물에 추가로 품종 보호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딸기 부추 심비디움(양란의 일종) 메밀 등 외국 종묘 업체가 종자를 개발한 작물이 많이 포함

돼 있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 개발자에게 해당 종자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로 이른바 '종자특허권'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딸기 한 포기당 10~100원의 로열티를 물어야 할 전망이다. 최대 딸기 한 포기 원가(100원)와 맞먹는 금액이다. 기존 품종 보호 대상인 장미 한 그루에 붙는 로열티는 1450원으로 원가(1050)의 1.4배다.

충남대 이영복(李永馥·원예학)교수는 "영세 농가가 생산원가의 10% 이상 로열티를 내면서 재배를 계속하기는 어렵다"며 "로열티를 판매가에 전가하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농가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묘 업체의 종자특허 등록도 잇따르고 있다. 외국계 종묘 업체는 2002년까지 한국에서 한 건의 특허권도 확보하지 못했지만 2003년 76건, 2004년 273건 등 최근 2년간 등록 건수가 급증했다.

국내 연구기관이 연도별 특허등록 건수는 2002년 76건, 2003년 234건, 2004년 204건이다.

“로열티까지 붙면 어떻게 버티나”

□ 한숨짓는 국내농가

“모종 원가의 10% 이상을 로열티로 내랴노, 농사짓지 말라는 소리죠.”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27년째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 김수현(金洙現·54)씨는 “올해처럼 위기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딸기가 품종보호 대상이 돼 원가가 100원인 일본산 모종 하나에 10원이 넘는 로열티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3000평 규모의 딸기밭에서 농사를 지어 올리는 총매출액은 연간 1억2000만 원, 인건비, 비료값, 시설비 등을 빼고 손에 쥐는 돈은 4800만 원이다. 딸기 로열티를 물고 나면 김 씨의 영업이익은 3600만 원 선으로 줄어든다.

그는 “밭이 300평 이하인 영세 딸기 농가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로열티 “내놔” “못 내놔”

종자전쟁 1차전은 로열티를 내지 않으려는 국내 농가와 반드시 장수하려는 외국 종묘회사 간 줄다리기로 시작했다.

2001년 장미가 품종보호 대상이 되면서 촉발된 이 분쟁은 국내 수요가 많은 작물이 품종보호 대상에 대거 포함되는 내년에는 훨씬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장미, 국화, 심비다움(양란), 딸기 등은 씨앗이 아닌 줄기의 일부를 떼어내 심어도 꽃을 피울수 있는 ‘영양 번식체’다. 종자만으로 번식하는 작물은 종자 값에 로열티를 붙여판다.

반면 영양 번식체는 로열티를 물리기가 어렵다. 농가들이 임의로 줄기를 떼어 번식시키기 때문이다. 이런점을 이용해 심비다움 등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로열티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화훼협회 박종찬(朴鍾燦) 회장은 “심비다움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가 품종보호에 대해 준비가 안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독일 코르데스사 등 외국

계 종묘회사가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국내 농가를 고소하는 등 분쟁도 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배(모종)보다 배꼽(로열티)이 크다”며 불만을 표출한다. 전남 강진군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한모 씨는 “외국회사들이 그루당 1050원 하던 장미 가격에 1450원의 로열티를 매기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고 말했다.

□ 가열되는 종자개발 경쟁

국내 연구기관과 외국계 종묘회사의 종자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일본 게이세이, 독일 코르데스, 미국 심플릿 등 세계적 종묘회사들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개발한 화훼 종자를 국내 종자산업법 상 품종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고 있다.

현재 외국계 종자회사가 품종보호 대상으로 신청한 작물은 모두 635개, 화훼작물이 626개로 가장 많고 채소 1개, 과수 8개 등이다. 장미 국화 봉선화 등 국내 수요가 많은 화훼작물에 특히 출원이 집중됐다.

국내 종자산업의 대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종묘회사가 신 품종을 개발할 여력이 없기 때문.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는 최근 대형 국화인 ‘원고 B1-97’을 개발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신품종 장미 ‘한마음’을 특허 출원했다.

□ 선택과 집중

원예연구소가 이달 중순 청와대에 보고할 ‘국내 종자산업과 로열티 지급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농가가 2003년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포인세티아 등 5가지 화훼작물에 대해 지급한 로열티는 137억4000만 원이다.

장미(129억 원), 카네이션(5억3000만 원), 국화(2억 원), 거베라(8000만 원), 포인세티아

(3000만 원) 등의 순.

원예연구소 박교선(朴敎善) 연구사는 “모든 작물에 대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는 없으므로 수요가 많은 작물 품종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 부담도 커져

로열티 지급이 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재배 농가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 소비자 판매가도 오르기 때문.

현재 100원 안팎인 딸기 모종 원가는 로열티가 더해지면 100~200원으로 뛴다. 이렇게 되면 2kg당 평균 7875원인 딸기 가격은 내년 이후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림부 당국자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국내 우량품종이 많이 개발되면 로열티 부담이 줄어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시장 다국적기업이 장악

홍농종묘, 중앙종묘, 서울종묘 등 한국의 대표적인 종자(種子)회사들은 외환위기 이후 대거 다국적기업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고추, 무, 배추 등 한국인이 많이 먹는 채소류의 토종 종자 소유권도 다국적기업에 넘어갔다.

세미니스, 신젠타, 사카타 등 미국계, 유럽계, 일본계 다국적 종자회사들은 연간 시장 규모가 1300억~1500억 원에 이르는 국내 채소종자 시장에서 50% 이상을 장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현태(朴炫泰) 박사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종자시장 장악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돼 있다”

고 말한다.

긍정적인 효과는 첨단 유전공학 기술 및 시설을 갖춘 다국적기업들이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국내 토종회사들도 자극을 받아 새로운 종자개발과 종자 보관 기술이 향상된 점.

한농바이오 유영우(劉永佑) 본부장은 “토종 종자회사인 농우바이오가 외국계 회사들을 제치고 시장점유율 2위로 올라선 것도 이런 자극 덕분”이라고 말했다.

딤핑판매, 다른 회사가 개발한 종자 베끼기 등 전근대적인 유통체계나 불공정한 경쟁문화도 많이 사라졌다.

부정적인 측면은 국내 토종 종자의 소유권을 다국적기업이 갖고 있어 이 분야에서 창출될 부가가치를 다국적기업이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고무, 무, 배추의 해외 수요가 크지 않아 이런 측면은 염려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문화산업의 ‘한류(韓流)현상’ 처럼 한국의 채소에 대한 해외 수요가 생기더라도 그 과실은 다국적 종자회사가 챙길 가능성이 높다. 다국적기업은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채소 개발과 마케팅 능력 면에서 토종기업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박현태 박사는 “다국적 종자회사들이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해 전 세계 종자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약진하고 있는 국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토종 종자업체들도 경쟁력 확보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엔 특허권 대상 모든 종자로 확대 품종별 실태조사부터 서둘러야

□ 국내농가 피해 줄이려면

‘종자전쟁’에 따른 로열티 급증 등 국내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종자개발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급하다.

정부는 1997년 12월 말 발효된 종자산업법을 근거로 2009년까지 모든 종자를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해 종자 개발업자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사과 배 등 155개 작물이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됐다.

내년에는 메밀 딸기 부추 등 31종의 작물이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되며 2008년에는 조기장 수수 감 자두 살구 매실 등 23종이 추가로 지정된다. 마지막으로 2009년에는 나머지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 계획을 세울 때 작물별로 국내 품종의 비율이 높은 작물을 먼저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국내 품종의 비율이 낮은 작물을 나중에 지정한다는 원칙을 따랐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국내 종자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내 종자 개발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벌여 이를 바탕으로 품종보호 대상 지정 계획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기 전에 국립종자관리소 등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지는 못했다”며 “딸기 등 일부 품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종이 보호대상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되고 있다”고 말했다.